

전문 치안 인력 ‘0명’... 광주 지하철 안전 ‘구멍’

‘지하철경찰대’ 등 미도입...위험 상황시 대응 취약

환경미화·역무직 중심 인력 배치...대책 마련 시급

광주 도시철도의 치안 공백 문제가 다시 수면 위로 떠오르고 있다. 개통 20여 년이 지났지만 역사 내 안전을 책임질 전문 인력인 ‘지하철보안관’이나 ‘지하철경찰대’가 여전히 도입되지 않아 위험 상황 발생 시 현장 대응이 취약하다는 지적이다. 16일 광주교통공사에 따르면 광주지하철 1호선은 동구 녹동역에서 광산구 병동역까지 총 20.5km 구간, 20개 역사를 운행 중이다. 2004년 1구간(녹동~상무),

2008년 2구간(김대중컨벤션센터~평동) 개통 이후 약 20년간 운영돼 왔지만 치안 인프라는 제자리걸음에 머물러 있다. 현재 20개 역사 중 19개 역사에 배치된 인력은 역무직 160명, 환경미화직 74명에 불과하다. 역사별 안전 관리 책임자인 역장은 8명으로, 1명이 2~3개 역을 동시에 맡는 구조다. 청원경찰은 도시공사 본사(서구 마북동)에 4명이 교대근무할 뿐, 각 역사에는 상주 인력이 없다.

교통공사는 비상상황 대비용 호신 스프레이 등을 역 사무실에 비치하고 있지만, 다수 직원이 비치 사실조차 제대로 알고 있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시각적 불안·위화감을 이유로 휴대조차 금지돼 실효성 논란도 이어지고 있다.

실제로 지하철 내 강력사건은 이미 전국적으로 반복되고 있다.

2023년 8월 상무역에서는 30대 여성 A씨가 약 35cm 흉기로 역무원을 위협해 경찰이 10여분만에 제압했다. A씨는 이전 같으므로 양심을 품고 계획적으로 범행을 시도한 것으로 드러났다.

지난달 21일 서울 2호선 당산역에서도 50대 남성 B씨가 “칼 꺼내면 다 죽는다”

고 협박해 체포됐다. B씨의 가방에서는 식칼 8자루와 가위 1개가 발견됐다.

광주 지하철 역시 유사한 위기에 대응할 전문인력이나 즉각 체포·제지 권한을 가진 조직이 없어 대응 공백 위험에 노출돼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일부 시·도는 지하철보안관이나 지하철경찰대를 운영하며 역사 내 질서 유지, 범죄 예방, 위험 상황 조기 대응 역할을 강화하고 있다.

그러나 광주는 “지하철 규모가 작고 범죄 취약지로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도입이 미뤄져 왔다.

하지만 2호선 개통을 앞두고 이용객 증가가 예상되는 만큼 전문 치안 조직 도입

필요성이 더욱 높아지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광주교통공사는 경찰·소방과 협조 체계를 구축하고 정기 통합훈련을 진행하며 대응력을 강화하고 있다는 입장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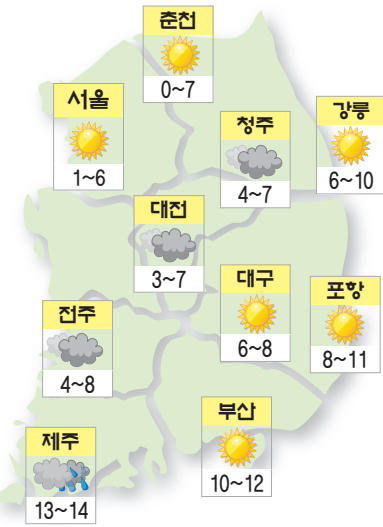
교통공사 관계자는 “직원들이 재난 대응 매뉴얼을 숙지하고 있으며 유관기관과 협력 체계를 지속 운영하고 있다”며 “이용객 안전 확보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나 전문가들은 “매뉴얼과 훈련만으로는 즉각적인 현장 대응에 한계가 있어 전문 치안 인력 도입, 권한 부여, 안전 장비 실험 호성 확보 등이 시급하다”고 지적하고 있

다. 윤용성 기자 yo1404@gwangnam.co.kr

오늘의 날씨

☀️ 예보 07:09 달걀 04:12
☁️ 예보 17:25 달걀 15:31



광주	☁️	6~9
목포	☁️	8~10
여수	☁️	9~11
순천	☁️	7~9
구례	☁️	5~9
광주	☁️	7~11
여수	☁️	8~12
목포	☁️	10~11
진남	☁️	7~11
진도	☁️	9~11

목포	밀물(고)	12:33 / ---:---
	썰물(저)	05:21 / 17:52
여수	밀물(고)	07:29 / 19:22
	썰물(저)	00:56 / 13:24

80대 노모 버린 아들 체포

만년필 ○~전남 완도에
서 80대 노모를 홀로 버려두고 떠난 50대 아들이 경찰에 붙잡혀.

전남 완도경찰은 16일 존속유기 혐의로 50대 후반 A씨를 불구속 입건.

A씨는 지난 13일 오후 5시께 완도군 완도를 국민건강보험공단 건물에 80대 어머니 B씨를 버려둔 채 떠난 혐의를 받아.

건물을 나온 뒤 차량으로 이동하던 A씨는 스스로 112에 전화를 걸어 “어머니를 버려두고 왔다”고 신고, 출동한 경찰은 강진군 한 도에서 A씨를 체포.

경기도에서 직장생활 중인 A씨는 B씨의 건강보험금도 상황이 이뤄지지 않은 데 불만을 품고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전해져.

B씨는 고령으로 휠체어를 이용하지만 비교적 의사소통은 가능한 상태로 알려져.

경찰은 A씨에 대해 노인학대 등 적용 가능한 범죄를 함께 검토해 최종 혐의를 결정할 방침.

완도=김해록 기자 knk1831@

12·29 제주항공 참사 재조사 잠정 중단

사조위·유가족 간 ‘현장 사진 촬영 금지’ 놓고 충돌

12·29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재조사가 사고 발생 11개월 만에 이뤄질 예정이었으나 잠정 중단됐다. 현장 사진 촬영 금지 조치를 두고 사고 조사위원회 등과 유가족 간 충돌이 발생했기 때문이다. 16일 12·29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유가족 협의회에 따르면 지난 14일 무안국제공항에서 국립과학수사연구원과 항공철도사고조사위원회가 참여하는 재조사가 시작했다. 이 자리에는 사조위 3명(조사관 2명, 사무국 1명), 국과수 20명, 유가족 20명 등이 참여했다. 재조사는 비행기 잔해 조사와 유류품·

시신 파편 발견 시 유전자 감식을 진행하는 방식으로 이뤄질 예정이었다. 그러나 사조위가 “조사에 영향을 줄 수 있다”며 유가족의 현장 사진 촬영을 전면 금지하면서 충돌이 발생했고, 약 2시간 대치 끝에 ‘근접 촬영만 금지’로 입장을 바꿨다. 하지만 유가족은 사조위의 일관성 없는 태도에 반발하며 재조사 중단을 결정했다. 유가족협의회 관계자는 “11개월 동안 진해를 방지해 놓고도 촬영을 제한한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며 “추후 논의해 재조사 일정을 다시 잡을 계획”이라고 말했다. 윤용성 기자 yo1404@gwangnam.co.kr

경찰, 비윤리 취재 논란 인터넷 기자 수사

신안 공무원 노조, 고발장 제출...광고비 요구 등 호소

신안군 공무원들에게 반복적인 정보공개 청구를 남발하고 무단침입까지 벌인 인터넷 매체 소속 A기자에 대해 경찰이 수사에 착수했다. 16일 전남 신안경찰에 따르면 최근 신안군 공무원노동조합이 “A기자를 건조물 침입·업무방해 등 혐의로 처벌해달라”며 제출한 고발장을 접수하고 관련 사실관계 파악에 착수했다. 고발장에 따르면 A기자는 지난해부터 신안군을 상대로 40여차례의 정보공개 청구를 제기한 뒤 “광고비를 주면 취하하겠다”는 취지의 발언을 하며 부당한 압박을 가한 것으로 전해졌다. 또 이해관계가 있는 공무원들에게 모욕적 언행과 협박성 발언을 서슴지 않아 심리적 고통을 유발했다는 주장도 포함됐다. 특히 지난 3일 오후 6시께는 읍사무소 태로 군청 당직실에 무단 침입했다가 경찰의 강제 조치로 퇴장한 사실도 드러났다. A기자의 행위가 반복되면서 일부 공무원들은 극심한 정신적 스트레스를 호소하고 있으며, 공직사회 내부에서는 “비윤리적이고 반사회적인 취재 방식이 더 이상 묵과돼서는 안 된다”는 비판 여론이 확산되고 있다. 신안경찰 관계자는 “A기자의 언론인 신분 및 자격 여부, 정보공개 청구와 취하과정, 광고비 요구 의혹, 무단침입·언어폭력 등 고발 내용 전반을 면밀히 조사하고 있다”며 “위법성이 확인될 경우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신안=이훈기 기자 leek2123@gwangnam.co.kr



감탄하iero(路) 아동친화거리 축제 지난 15일 광주 서구 치평동 윤천어린이공원 인근 보행자전용도로에서 열린 ‘감탄하iero(路) 아동친화거리 축제’에서 김이강 광주 서구청장과 참석자들과 어린왕자 미디어파사드 등을 살펴보고 있다. 최기남 기자 bluesky@gwangnam.co.kr

광산구 ‘천원주차장’ 골목상권 효자...이용·수입 ↑

광주송정역 뒤 주차장 등 9곳 운영...시행 효과 뚜렷

불법주차 크게 줄어...22일까지 확대·개선안 마련

광주 광산구가 시행 중인 ‘천원주차장’ 제도가 골목상권 중심의 생활밀착형 주차 정책으로 자리 잡고 있다.

16일 광산구에 따르면 천원주차장은 ‘천원 더 가치 프로젝트’의 핵심 정책 중 하나로, 시민경제 회복과 지역상권 활력 제고를 위해 지난 4월부터 추진했다.

광산구는 장기 경기침체와 주택가 주차난을 동시에 해결하기 위해 2시간 주차요금을 1000원으로 낮춘 천원주차장 제도를 도입했다. 단순 요금 인하가 아니라, 서민경제 부담 완화와 소상공인 중심 상

권 접근성 향상을 목표로 한 생활형 교통 정책이다.

현재 천원주차장은 광주송정역 뒤, 무진로, 우산동행정복지센터 앞, 광산문화예술회관 앞, 운남동, 수안동행정복지센터 앞, 수안문화체육센터 지하, 하남3지구 주차타워 1·2 등 총 9곳에서 운영되고 있다.

시행 효과도 뚜렷하다. 월 이용 대수는 시행 전 3만9555대에서 시행 후 4만5263대로 14% 증가했다. 특히 광주송정역 뒤 골목 주차장은 2시간 요금을 1600원에서 1000원으로 인하한 이후 이용률이 27%

상승했다.

수익 감소 우려와 달리 공영주차장 전체 수입은 전년 대비 26~29% 증가해 이용률 확대와 수익 개선을 동시에 달성한 사례로 평가받고 있다.

‘천원주차장’ 시행 후 상가 방문객 접근성이 높아지고 불법주차자가 줄어들면서 도로 혼잡 완화와 골목상권 활력 회복에도 긍정적 영향을 미쳤다. 저렴한 요금으로 시민들이 부담 없이 이용할 수 있어 생활비 절감과 만족도 향상 효과도 나타나고 있다.

광산구는 오는 22일까지 시민 만족도 조사를 진행해 주민 의견을 반영한 천원주차장 확대 및 운영 개선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임정호 기자 jh4415@



“수험생도 밤 10시까지 귀가”

시교육청 등 199명, 26일까지 유해업소 출입 등 단속

수능이 끝나고 첫 주말인 지난 15일 오후 6시, 광주 동구 종창로 일대가 긴장감으로 뒤덮였다. 거리 곳곳에서 “수험생도 밤 10시까지의 귀가해야 합니다”라는 경찰의 안내가 이어졌고, 골목마다 배치된 단속 인력의 빠른 움직임이 이어졌다.

광주경찰청을 비롯한 교육청·지자체 등 11개 기관은 2026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이 치러진 지난 13일 오후부터 청소년의 탈선 행위와 유해환경 노출을 막기 위한 합동 거리 상담·단속을 진행했다. 수능 직후 첫 주말이 ‘가장 위험한 시기’라는 판단에 따른 것으로, 이날 총장

로에는 80여명의 단속반이 투입돼 상가 밀집지역과 술집 골목, 공원 주변 등을 반복적으로 순찰했다.

도심에는 오랜 긴장감에서 벗어난 수험생들의 발걸음도 이어졌다. 가족과 외식에 나선 학생들, 친구들과 상점을 돌며 “이제 해방이다”라고 외치는 모습도 곳곳에서 눈에 띄었다.

학부모 김연화(47) 씨는 “아들이 힘든 시간을 잘 이겨내 자랑스럽다”며 “수능 끝난 첫 주말이라 함께 외식에 나왔다”고 말했다. 아들 오은찬(19) 군도 “입시가 완전히 끝난 건 아니지만 오늘날만큼은

쉬고 싶다”며 밝은 표정을 보였다.

단속반은 업주들에게 미성년자 출입 여부 확인을 철저히 해달라고 요청하는 한편, 청소년들에게는 “위험한 곳에 가지 말고 바로 귀가하라”고 거듭 안내했다.

일부 학생들이 골목에서 장난을 치자 경찰이 즉시 접근해 “지금 시간대는 위험하니 안쪽 골목으로 가지 말라”고 제지하는 모습도 목격됐다.

수능 주말 분위기를 반영한 캠페인도 함께 진행했다. 광주시와 자치구, 경찰서, 청소년유해환경감시단 등은 따뜻한 음료와 간식류를 나눠주며 비행 예방 캠페인을 펼쳤다.

총창로 외에도 상무지구 먹자골목, 수완지구 국민은행 사거리, 진월동 푸른길, 봉선동 학원가, 전남대 후문 등 광주 주요 지역에는 총 199명이 배치돼 청소년 음주·흡연, 심야배회 등을 집중 점검

했다.

이성과 광주 동부경찰서 청소년보호계 경위는 “수능 직후 첫 주말은 가장 민감한 시기”라며 “총창로처럼 유흥시설 밀집 지역은 인력을 늘려 집중 단속하고 있다”고 밝혔다.

실제로 이날까지 청소년 음주·흡연, 심야 배회 등 비행 징후나 위반 업소는 발견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15일 5·18민주광장에서 열린 ‘인성키움 한마당’ 행사에서도 청소년 비행 예방 활동을 이어갔으며, 이번 합동 단속은 26일까지 2주간 확대 운영된다. 이후에도 겨울방학·졸업 시즌이 포함된 내년 2월 28일까지 청소년 보호 활동을 지속할 예정이다.

임재웅 인턴기자 djawodyd0316@

*이 기사는 지역신문발전기금을 지원받았습니다.

‘女공무원 백댄서’ 파장 확산

행안부 경위서·복구 자체 감사

문인 광주 북구청장이 여성 간부공무원들과 함께 전국노래자랑 무대에 오른 것에 대한 파장이 이어지고 있다.

16일 복구에 따르면 문 정장은 동강대학교 운동장에서 열린 ‘KBS 전국노래자랑 복구 편’ 녹화에서 트로트 곡을 부르며 무대에 올랐다.

이 과정에서 광주 북구 소속 자치행정국장, 가족복지국장, 보건소장, 주민자치과장, 체육관광과장, 오치1동장, 동림동장, 중흥동장 등 8명의 여성 간부 공무원들이 문 정장의 뒤에서 음악에 맞춰 춤을 추는 이른바 ‘백댄서’ 역할을 했다.

이들은 공연 참여를 위해 ‘공무 수행’ 명목으로 출장 신청을 한 것으로 확인됐다. 논란이 확산하자 행정안전부는 최근 복구에 유선으로 경위서 제출을 요청했다.

이에 복구는 17일부터 해당 여성 공무원들을 대상으로 감사를 진행하기로 했다. 임영진 기자 looks@gwangnam.co.kr